

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 윤 거부땀 탄핵소추 발의

박홍근 “금주 본회의 처리”

정진석 “막가파식 모순 정치”

오늘 본회의서 표결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비쳤으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향후 대응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는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국회의힘은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배경을 두고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다.

여당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경찰·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국정조사에서) 증언할 수 있겠냐”라며 “일선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면 (이 장관을)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도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보고에 필요하다고 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률 안건이 없다면 해당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 게 맞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행안부 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조사 대상인 장관을 조사 개시도 하기 전에 해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임 건의를) 대통령이 거부하면 (장관)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건 무슨 공갈·

협박도 아니고,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서야 되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왜 갑툭튀(갑자기 튀어나옴) 뜬금없는 해임 건의며 탄핵이며 들고나오는 건가. 민주당도 설명을 못 하고 있다”며 “자기 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건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원희룡 “언제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

“명분 쌓기용 만남 의미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외에도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에 대해 언제든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날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이날 오전 기준으로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고 60~70%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차주들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파업 시작 후 두 번째로 마주 앉은 상황에서, 원 장관은 ‘협상’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

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데도 (화물연대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거부를 하는 식으로 억지 명분 만들기를 하지 말라”며 “이렇게 하면 오늘(30일) 면담도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며 “이미 국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지 다 잡혀있다”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집단운송거부) 원만히 회복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 의장, 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예산안 본회의 처리시 자동 통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개정안 16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금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증과세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대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두 법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무조건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편해 대학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처리와 함께 법안도 자동으로 통과된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